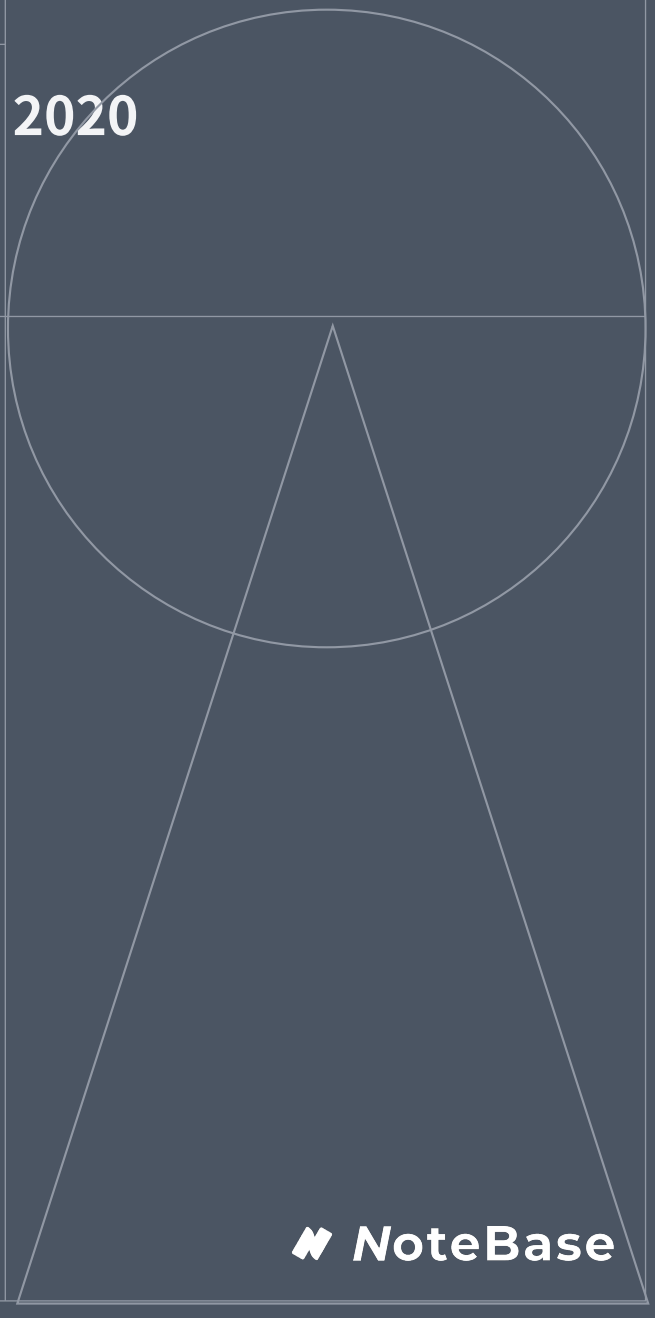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 · 2020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 · 2020

문 1. 국제사회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기점으로 영토, 국민, 주권을 지닌 국민국가가 국제사회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② 국제연맹은 미국의 참여와 주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탈퇴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③ 미국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는 국가에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④ 19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되면서 민족, 종교, 영토, 자원 등으로 인한 분쟁은 오히려 증가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미국의 참여와 주도'가 잘못된 설명이다.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 창설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상원의 반대로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다**.

선지별 해설

① O: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전쟁을 마무리하고,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중시하는 근대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주권 국가가 국제사회의 중심 주체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② X: 국제연맹 창설은 미국 윌슨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미국은 상원의 반대로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의 참여와 주도'는 '미국의 불참'으로 고쳐야 한다. 미국의 불참과 일본·독일·이탈리아의 탈퇴는 국제연맹이 침략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③ O: 미국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여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한 **군사·경제 원조** 방침을 밝혔다. 당시 공산주의 세력이나 소련의 압력을 받던 그리스와 튀르키예에 대한 지원이 대표적이다.

④ O: 1990년대 냉전 종식으로 미국과 소련 중심의 이념 대립은 약화되었지만, 그동안 억눌려 있던 **민족·종교 갈등과 영토·자원 분쟁**이 표면화되었다.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의 분쟁처럼 지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냉전의 종식이 곧 모든 분쟁의 감소나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NoteBase

문 2. 국가의 구성요소인 주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반 사회 집단도 소유할 수 있다.
ㄴ.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만이 갖는 권한이다.
ㄷ.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소재가 국민에게 있다.
ㄹ. 주권은 대내적으로 최고성,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대통령 개인이 독점하는 권한이 아니다. 주권은 국내의 다른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최고성**과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갖는다.

보기별 해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다. 국가가 다른 사회 집단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ㄱ. X: 일반 사회 집단은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그 권한은 국가의 법질서 안에서 인정된다. 주권은 이러한 집단의 권한과 달리 **국가에 고유한 최고 권력**이므로 일반 사회 집단이 소유할 수 없다.

ㄴ. X: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주권 자체를 독점하는 주체가 아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국가기관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ㄷ. O: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은 선거 등을 통해 국가권력의 행사에 참여한다.

ㄹ. O: 주권의 대내적 **최고성**은 국내에 주권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이 없다는 뜻이다. 대외적 **독립성**은 다른 국가의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며, 이 조합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④이다.

NoteBase

문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 주민들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가진다.

② 기초의회는 비례대표 의원 없이 지역구 의원만으로 구성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한다.

④ 교육자치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교육감을 두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주민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주민이 지역의 자치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 규범이다. 주민은 법에서 정한 자격과 연대 서명 등의 요건을 갖추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주민의 직접 참여 수단이며, 청구만으로 조례가 제정되거나 바뀌는 것은 아니다.

② X: 시·군·자치구의 기초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의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므로 지역구 의원만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X: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확정된 예산을 집행한다. 지방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재정 활동을 통제한다.

④ X: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단위**에 둔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마다 별도의 교육감을 두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의원 A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려고 한다.
◯ 정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

① ㉠의 발의자는 국회의원 5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 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법률안을 다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은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5인 이상이라는 요건은 잘못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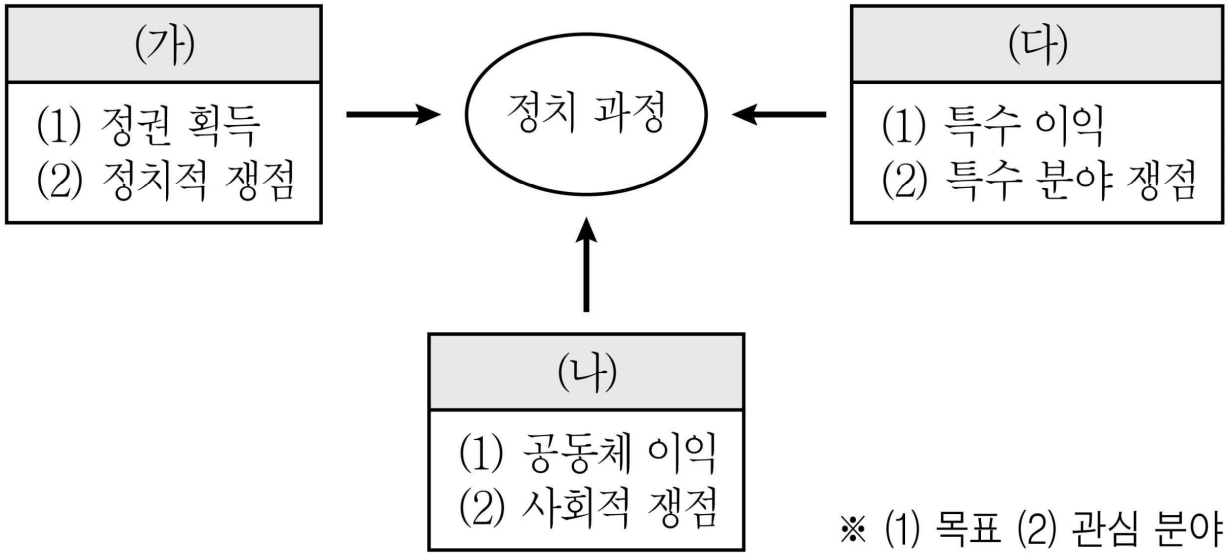
② O: 헌법 제5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환부는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이며, 재의 요구는 다시 심의·의결해 달라는 요구이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가능하다.

③ X: 정부가 제출하는 ㉡은 헌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국회 제출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④ X: 헌법 제5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되지 않는다**. 이를 회기계속의 원칙이라고 하며, 다음 회기에도 심의를 이어 갈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된다.

NoteBase

문 5. 그림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중 하나이다)



① (가)는 정치적 충원과 여론 형성 및 조직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나)는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집단이다.

③ (다)는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

④ (가)와 (다)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정당과 이익집단의 공통점이 아니다. 정당은 정치 활동의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이익집단은 정권을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에서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가)는 정당,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나)는 시민단체,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다)는 이익집단이다. 세 집단 모두 정치 과정에 참여하지만 목표와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

① O: 정당은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발굴하고 공천하여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는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모아 정책과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화한다.

② O: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그림에서 (나)가 사회적 쟁점에 관심을 두고 공동체 이익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이에 해당한다.

③ O: 이익집단은 특정 직업이나 산업 등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 집단에 유리한 정책만을 요구하면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 이는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며, 모든 활동이 공익에 어긋난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정당은 정권 획득을 추구하며, 제시한 정책과 정치 활동의 결과에 대해 선거 등을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반면 이익집단은 정권 획득 자체보다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정당과 이익집단의 공통점은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며, 정권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공통점이 아니다.

NoteBase

문 6. 연령기준과 관련된 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은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25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민법」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한 연령 요건은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이다. ②의 '25세'는 '40세'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민법 제807조는 혼인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18세**로 정한다. 따라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적령에 이른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민법 제80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X: 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에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할 것**을 요구한다. 피선거권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어 당선될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따라서 선지의 '25세'는 '40세'로 고쳐야 한다.

③ O: 민법 제4조에 따라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인 18세와 민법상 성년이 되는 연령인 19세는 서로 다르다.

④ O: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인정한다. 선거권은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에 이르기 전에도 이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NoteBase

문 7. 상점 절도를 저지른 갑 ~ 정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구분	갑	을	병	정
10세 이상의 '소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인가요?	예	아니요	아니요	예

<보기>

ㄱ. 갑과 정은 모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ㄴ. 정의 연령은 을, 병보다 높지만 갑보다는 낮다.

ㄷ. 을, 병은 모두 형사 미성년자이다.

ㄹ. 검사는 정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에 대한 처분**이므로, 19세 이상인 갑은 대상이 될 수 없다. 표에서 정은 기소할 수 있는 소년이므로 **14세 이상 19세 미만**이고, 기소할 수 없는 을·병은 14세 미만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은 19세 미만이고,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표의 '10세 이상의 소년' 여부와 기소 가능한 연령인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갑은 기소할 수 있지만 10세 이상의 소년은 아니므로 19세 이상이다. 을은 두 항목 모두 '아니요'이므로 10세 미만이다. 병은 10세 이상의 소년이지만 기소할 수 없으므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고, 정은 두 항목 모두 '예'이므로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ㄱ. X: 소년법 제49조의3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에게 선도·교육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정은 소년이므로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지만, **19세 이상인 갑은 이 소년 대상 처분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갑과 정 모두 가능하다는 부분을 정만 가능하다고 고쳐야 한다.

ㄴ. O: 정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고, 을은 10세 미만, 병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갑은 19세 이상이므로 정은 **을·병보다 나이가 많고 갑보다 나이가 적다**.

ㄷ. O: 형사 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14세 미만인 사람**이다. 을은 10세 미만이고 병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므로 둘 다 형사 미성년자이다.

ㄹ. O: 정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사유를 인정한 경우의 의무이므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정에게도 적용된다.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며, 이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국회 인사청문회의 청문대상 공직이 아닌 것은?

① 대법원장

② 감사원 감사위원

③ 국무총리

④ 대법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감사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은 **감사원장**이다.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공통 해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률이 정한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임명 전에 검증하는 절차이다.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과 제65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 대상**이다. 따라서 선지의 대법원장·국무총리·대법관은 모두 청문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구별**해야 한다.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은 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이 정한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감사위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9. 갑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만 18세인 갑은 친권자인 양부모의 동의를 얻어 을이 사장인 주유소에서 하루 8시간씩 근로를 하게 되었다. 사장인 을은 근무 기간이 3개월이 안 될 경우 유급 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갑은 3개월간 쉬는 날 없이 성실하게 일하였다. 그 동안 학업을 병행하느라 월급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양부인 병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의 임금이 병에게 지급되고 있었다.

① 갑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민사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양부모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갑의 임금을 대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④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휴식 시간은 1일 1시간 보장되고, 근로 시간은 1일 30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주휴일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생기는 권리가 아니다**. 갑처럼 주휴일 요건을 갖추어 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근로기준법 제69조의 1일 7시간 제한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갑은 만 18세이므로 이 연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갑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제50조).

② O: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한다. 이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즉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하루 8시간씩 쉬는 날 없이 성실히 일한 갑에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휴일을 부정할 수 없다**.

③ X: 갑은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양부모가 동의하는 것과 갑을 대신해 계약 당사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다르므로, 근로계약은 갑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제68조),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제43조제1항). 따라서 병이 친권자라는 이유로 갑의 임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도 없다.

④ X: 하루 8시간 일하는 갑에게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며, 갑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또한 갑은 만 18세이므로 일반적인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된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을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제53조제1항), 연장 한도를 '1일 30분'으로 설명한 것은 잘못이다.

NoteBase

문 10. 민법의 기본원리인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구분	관련 내용
(가)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나)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	가해자는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보기>

ㄱ. (가)는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사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ㄴ. (나)에 의해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ㄷ. (다)는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ㄹ. (가)와 (다)는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재산권 행사를 공공복리에 맞게 제한하는 (가)와 고의·과실이 없어도 일정 요건 아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다)는 모두 **개인·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표의 (가)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나)는 사적 자치의 원칙, (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나)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뜻이며,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ㄱ. X: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사적 지배를 인정하되 그 행사를 공공복리에 맞게 제한**한다. 개인의 재산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원칙이 아니다. 헌법 제23조도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ㄴ. X: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나)의 사적 자치는 계약의 체결 여부와 내용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원칙이다. 다만 그 자유에도 한계가 있어,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ㄷ. O: 제조물 책임에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이러한 책임을 규정하며, 해당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ㄹ. O: (가)는 재산권 행사에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다)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 아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두 원칙은 각각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과실 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옳은 보기는 ㄷ과 ㄹ이며, 이 조합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다음은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수집한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 분석
(나) 자기주도학습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주제로 선정
(다) 자기주도학습 태도를 지닌 고등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 도출
(라) ○○시 △△고교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마) 학업 성취도는 1학기와 2학기의 지필평가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측정하기로 결정

① (가) 단계와 (다)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적 태도가 요구된다.
② (가) 단계에서는 (다) 단계와 달리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 필요하다.
③ (나) 단계와 (마)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④ 연구는 (나)→(라)→(가)→(마)→(다)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연구 주제를 고르는 (나)와 측정 방법을 정하는 (마)에서는 **연구자의 관심과 가치가 개입**할 수 있다. 반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는 개인적 기대에 맞추어 결과를 왜곡하지 않는 가치 중립적 태도가 요구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자료 분석 및 가설 검증 단계이므로 가치 중립적 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결론이 아니라, 두 변수의 관계를 미리 예상하는 **가설 설정** 단계이다. 가설의 내용을 정할 때는 연구자의 관심과 가치가 개입할 수 있으므로, 두 단계 모두를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단계로 묶을 수 없다.

② X: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은 (다)의 가설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 태도와 학업 성취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 잠정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가)에서는 그 예상을 직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가설이 자료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③ O: (나)는 연구 주제 선정, (마)는 연구 설계 단계이다. 무엇을 연구할지는 연구자의 관심과 문제의식에 따라 달라지고, 연구 설계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떤 관찰 가능한 지표로 측정할지 선택한다. (마)에서 학업 성취도를 지필평가 평균 점수로 측정하기로 한 것이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할 수 있다**. 이는 조사 자료를 임의로 바꾸거나 분석 결과를 왜곡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올바른 진행 순서는 **(나) → (다) → (마) → (라) → (가)**이다. 먼저 연구 주제를 정하고, 자기주도학습 태도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가설로 설정한다. 이어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측정 방법을 설계한 뒤, 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따라서 자료 수집·분석보다 가설 설정과 연구 설계가 앞서야 한다.

NoteBase

문 12. 다음에 제시된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회사 내 노동조합
B. 직장 내 등산 동호회
C. 환경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① A는 자발적 결사체이자 비공식 조직이다.
② B는 공식 조직으로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③ C는 A와 달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④ A~C는 모두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는 이익 사회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A~C는 모두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합한 이익 사회**이다. 노동자의 권익, 여가 활동, 환경 보호 등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드러내므로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A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공통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자발적 결사체이다. 다만 명시적인 규약과 조직 체계를 갖추어 목적을 추구하므로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공식 조직**이다.

② X: B의 직장 내 등산 동호회는 공식 조직인 직장 안에서 공통의 취미와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비공식 조직**이다. 구성원 사이의 친목과 정서적 교류가 중시되므로 2차 집단보다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③ X: C의 시민단체는 환경 정책 감시라는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 A의 노동조합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형성되었으므로, **A와 C 모두 목적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공동 사회와 구별된다.

④ O: 이익 사회는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선택하여 결합한 집단이다. A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B는 등산과 친목, C는 환경 정책 감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모두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중심으로 집단이 형성되고 활동**하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한다.

NoteBase

문 13. 자료 수집 방법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 수집 방법	특 징
(가)	–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다수의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얻는 데 용이함 – 통계처리가 용이하며 비교 분석 연구에 적합함
(나)	– 문맹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음 – 응답자만이 알고 있는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다)	– 의사소통이 어려운 집단을 조사할 때 유용함 – 생동감 있고 깊이 있는 정보를 직접 파악할 수 있음

① (가)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② (나)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③ (다)는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④ (가), (나)와 달리 (다)는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질문에 답하게 하여 자료를 모으는 **질문지법**이다. 응답을 수치화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쉬워 **양적 연구**에 주로 활용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질문지법이다. 표의 '짧은 시간에 다수의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 '통계 처리와 비교 분석에 적합'이라는 특징이 단서이다. 미리 작성한 질문지로 표준화된 응답을 얻으므로, 사회 현상을 수치로 측정하고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에 주로 활용된다.

② X: (나)는 면접법이다. 조사자가 대상자와 직접 대화하며 자료를 수집하므로 글을 읽고 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답변의 의미를 추가로 물어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와 개별적으로 대화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다수의 대상에게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자료를 모으기 쉬운 방법은 질문지법이다.

③ X: (다)는 참여 관찰법이다.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참여하여 행동과 상호 작용을 직접 관찰하므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집단에서도 생생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위적인 상황에서 변수를 통제·조작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참여 관찰법이 아니라 실험법이다.

④ X: (다)인 참여 관찰법뿐 아니라 **(나)인 면접법도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다. 면접법은 대화를 통해 대상자의 생각과 경험을 깊이 파악하고, 참여 관찰법은 현장에서 행동과 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반면 (가)인 질문지법은 표준화된 응답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양적 연구에 주로 활용된다.

NoteBase

문 14. 사회화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개인은 사회적 환경 속의 다른 대상자들처럼 자신을 대상으로 보는 과정을 통하여 자아를 형성해 간다. 또한 개인이 자아 관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강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가족, 또래 집단 등이 중요하다.
을: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배우고, 게임의 규칙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모방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태도와 역할을 배우게 된다.

① 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은 사회의 지배 집단에 의하여 규정된다.

② 사회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회화는 사회구조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③ 사회화는 언어나 몸짓, 기호와 같은 상징을 사용하여 다른 사회 구성원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④ 사회화는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며, 기득권층에 유리한 가치와 행동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갑은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을은 게임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과 규칙을 배우는 과정을 강조한다. 둘 다 **상징을 매개로 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관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갑과 을은 모두 개인 간 상호 작용에 주목하는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 해당한다. 갑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또래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을은 게임에 참여하면서 여러 사람의 역할과 공통 규칙을 이해하고 사회에서 기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과정을 설명한다.

① X: 사회의 가치와 규범이 지배 집단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의 설명이다. 갈등론은 가치와 규범에 지배 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된다고 본다. 갑과 을은 지배 집단의 영향보다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한 자아와 역할의 형성에 주목한다.

② X: 사회화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사회구조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과정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이다. 기능론은 구성원이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학습하여 사회가 통합된다고 본다. 갑과 을의 관점은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배우는 미시적 과정에 초점을 둔다.

③ O: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언어·몸짓·기호처럼 **의미를 공유하는 상징**을 매개로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며 사회화된다고 본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하거나 게임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과 규칙을 배우려면, 서로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갑과 을이 설명한 사회화 과정을 뒷받침한다.

④ X: 사회화를 기득권층에 유리한 가치와 행동을 학습시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정당화·재생산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갑과 을의 관점에서는 사회화를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적 역할을 배우는 과정으로 설명해야 한다.

NoteBase

문 15. 다음 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

구분		부모의 계층			
		상	중	하	계
자녀의 계층	상	2	8	10	20
	중	6	14	40	60
	하	2	8	10	20
	계	10	30	60	100

①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② 부모 세대 상층의 경우 세대 간 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③ 자녀 세대보다 부모 세대에서 세대 내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④ 부모가 중층인 경우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과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은 같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부모가 중층이고 자녀가 상층인 경우와 하층인 경우는 각각 전체의 8%이다. 두 비율 모두 **부모가 중층인 집단**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과 하강 이동 비율이 같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자녀 세대의 계층별 비율은 표 오른쪽 '계' 열에서 읽는다. 상층 20%, 중층 60%, 하층 20%로 **중층의 비중이 가장 큰 다이아몬드형**이다. 피라미드형은 하층의 비중이 가장 크고 상층으로 갈수록 비중이 작아지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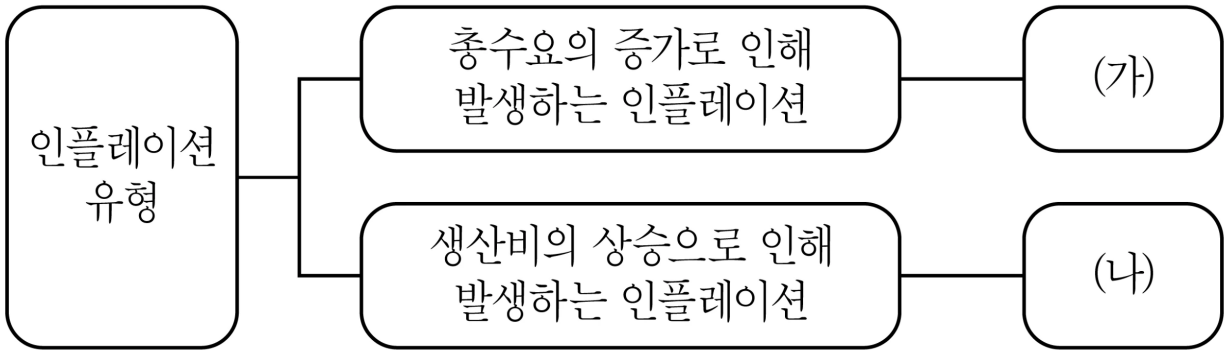
② X: 부모가 상층인 경우는 '부모의 계층' 중 상층 열에서 읽는다. 자녀가 상층인 경우는 전체의 2%이고, 중층인 경우는 6%, 하층인 경우는 2%이다. 부모보다 자녀의 계층이 낮아진 사례가 있으므로 **세대 간 하강 이동이 일어났다**.

③ X: 세대 내 이동은 **한 개인의 생애 안에서 일어나는 계층 이동**이다. 이 표는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비교하여 세대 간 이동을 보여 줄 뿐, 각 개인의 과거와 현재 계층은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중 어느 쪽에서 세대 내 이동이 더 활발했는지는 알 수 없다.

④ O: 부모가 중층인 집단은 표 아래 '계' 행에서 전체의 30%이다. 그중 자녀가 상층인 경우와 하층인 경우는 각각 전체의 8%이므로, 부모 중층 집단 안에서의 상승 이동 비율과 하강 이동 비율은 각각 $\frac{8}{30} \times 100\% \approx 26.7\%$로 같다. **분모는 부모 중층 집단의 비중인 30%**이며, 표의 8%를 이 집단 안에서의 이동 비율로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NoteBase

문 16. 그림 (가)와 (나)의 인플레이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가정한다)



① (가)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② (나)의 원인은 임금 상승, 임대료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다.

③ (가)는 실질 GDP의 증가, (나)는 실질 GDP의 감소를 가져온다.

④ (가)는 총수요곡선의 우측 이동, (나)는 총공급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나타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가)는 총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와 실질 GDP가 함께 상승한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나)와 같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그림에서 (가)는 총수요의 증가로 발생하므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고, (나)는 생산비의 상승으로 발생하므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문제에서 가정한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이용하되, 각 변화에서 다른 곡선은 그대로라고 본다.

① X: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에서는 총수요 증가로 생산이 늘어나므로 경기 침체가 동반되지 않는다. 생산비 상승으로 총공급이 감소하는 **(나)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② O: 임금, 임대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가 상승한다. 이에 따라 같은 물가 수준에서 기업이 공급하려는 생산량이 줄어들어 **총공급이 감소**하므로 (나)의 원인이 된다.

③ O: (가)에서는 총수요 증가로 균형점이 기존 총공급곡선을 따라 오른쪽 위로 이동하여 물가와 실질 GDP가 함께 상승한다. (나)에서는 총공급 감소로 균형점이 기존 총수요곡선을 따라 왼쪽 위로 이동하여 **물가는 상승하고 실질 GDP는 감소**한다.

④ O: (가)의 총수요 증가는 각 물가 수준에서 경제 전체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총수요곡선의 우측 이동**으로 나타난다. (나)의 생산비 상승은 각 물가 수준에서 공급하려는 양을 줄이므로 **총공급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나타난다.

NoteBase

문 17. 다음은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각 빈칸에 적절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한다)

구분	생산 측면의 (가)	소비 측면의 (나)
영향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다.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낮다.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
문제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
개선책	(㉤)	(㉥)

① (가)는 '외부 경제', (나)는 '외부 불경제'이다.

② ㉠과 ㉡ 모두 '작다'이다.

③ ㉢은 '과다 생산', ㉣은 '과소 소비'이다.

④ ㉤은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 ㉥은 '소비자에게 세금 부과'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생산자가 제3자에게 끼친 피해를 비용에 반영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한다. 소비가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을 소비자가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소비**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가): 외부 불경제. 생산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가 생기지만 생산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이다. 외부 비용을 반영한 공급곡선은 시장의 공급곡선보다 위에 놓인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사회적 최적점에서는 시장 균형보다 거래량이 적고 가격은 높아진다. 따라서 표의 생산 측면은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나): 외부 경제. 소비가 제3자에게 이익을 주지만 소비자가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외부 편익을 반영한 수요곡선은 시장의 수요곡선보다 위에 놓인다.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므로 사회적 최적점에서는 시장 균형보다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높아진다. 따라서 표의 소비 측면은 **외부 경제**에 해당한다.

㉠: 크다. 사회적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 비용에 **제3자가 입는 피해인 외부 비용**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도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크다.

㉡: 크다. 사회적 편익은 소비자 자신의 사적 편익에 **제3자가 얻는 이익인 외부 편익**을 더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서도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크다.

㉢: 과다 생산. 생산자는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실제보다 작게 인식한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초과**하여 생산한다.

㉣: 과소 소비. 소비자는 자신이 얻는 편익만 고려하고 제3자에게 돌아가는 외부 편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에 못 미치는** 양을 소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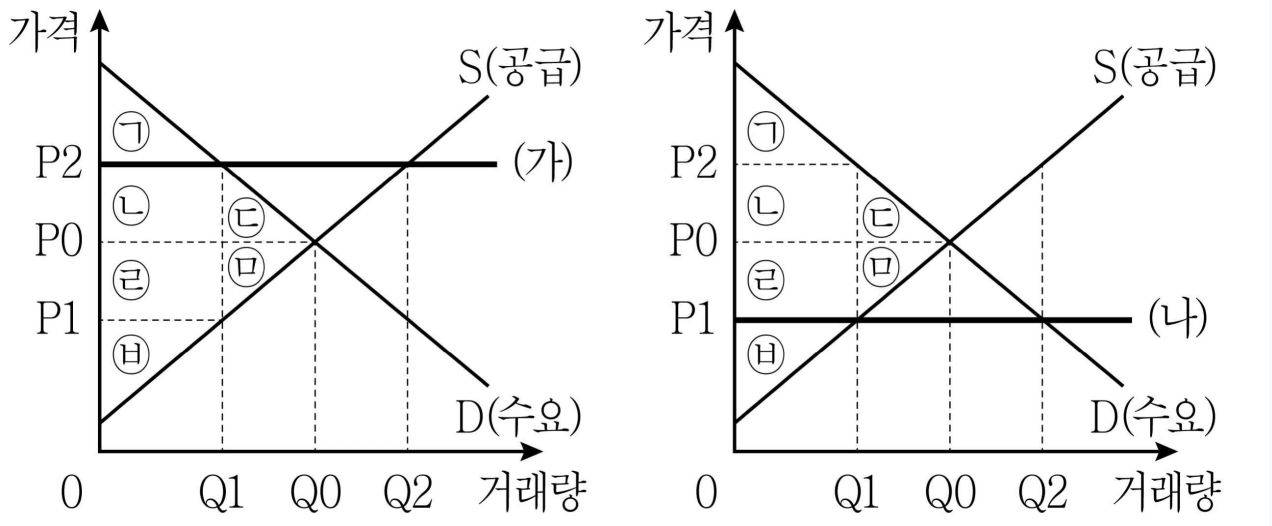
㉤: 생산자에게 세금 부과. 생산자가 외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세금을 부과하면 사적 생산 비용이 높아져 과다 생산을 줄일 수 있다. **외부 비용을 생산자의 의사 결정에 반영**하게 하는 방식이다.

㉥: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 보조금으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추면 소비가 늘어나 과소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제3자에게도 이익을 주는 소비를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의 '과다 생산'과 ㉣의 '과소 소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③이다.

NoteBase

문 18. 정부가 시장에 대해 두 가지 가격규제 정책 (가)와 (나)를 시행할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를 시행하면 Q1⊠Q2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사회적 잉여 ㉢+㉤이 감소한다.

②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였던 ㉣+㉤은 소비자 잉여로 바뀐다.

③ (가)와 (나), 두 경우 모두 사회적 잉여 ㉢+㉤이 감소한다.

④ (가)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 (나)를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가)는 균형가격보다 높은 최저가격제이고, (나)는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제이다. 두 경우 모두 실제 거래량이 Q_0에서 Q_1로 줄어, 성사되지 못한 거래의 이익인 **㉢+㉤만큼 사회적 잉여가 감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에서 실제 지불액을 뺀 이익이고, 생산자 잉여는 판매 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이익이다. 그래프에서 각각 수요곡선 아래·거래가격 위의 면적과 거래가격 아래·공급곡선 위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규제 전에는 수요·공급곡선의 교점에서 가격이 P_0, 거래량이 Q_0이며, 소비자 잉여는 ㉠+㉡+㉢, 생산자 잉여는 ㉣+㉤+㉥이다.

① X: (가)는 가격을 P_2 아래로 내리지 못하게 하는 최저가격제이다. 이 가격에서 수요량은 Q_1, 공급량은 Q_2이므로, $Q_2 - Q_1$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따라서 초과수요라는 부분을 초과공급으로 고쳐야 한다. 실제 거래량은 수요량인 Q_1에 그쳐 사회적 잉여가 ㉢+㉤만큼 감소한다는 부분은 맞다.

② X: (나)는 가격을 P_1보다 높게 받지 못하게 하는 최고가격제이다. 공급량이 Q_1이므로 실제 거래량도 Q_1이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기존 생산자 잉여 중 **㉣만 소비자 잉여로 이전**된다. ㉤은 Q_1부터 Q_0까지의 거래가 사라져 발생한 손실이므로 소비자 잉여로 바뀌지 않는다. 규제 후 소비자 잉여는 ㉠+㉡+㉣, 생산자 잉여는 ㉥이다.

③ O: (가)에서는 수요량이, (나)에서는 공급량이 실제 거래량을 제한하여 두 경우 모두 Q_1만 거래된다. Q_1부터 Q_0까지는 수요곡선이 공급곡선보다 위에 있어 소비자의 지불 의사가 생산비보다 크지만, 가격규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구간에서 잃는 소비자·생산자의 이익을 합한 **㉢+㉤이 사회적 잉여의 감소분**이다.

④ X: (가)에서는 가격이 P_0에서 P_2로 올라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며, 거래량도 Q_1로 줄어든다. 소비자 잉여는 ㉠만 남아 **㉡+㉢만큼 감소**한다. (나)에서는 가격이 P_1로 내려가고 거래량도 줄어 생산자 잉여가 ㉥만 남으므로 **㉣+㉤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선지에 제시된 두 잉여는 모두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NoteBase

문 19. 다음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각 국가 통화 가치의 변동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구분	원화	엔화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상승	하락

① 한국 기업의 달러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② 일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한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감소한다.

③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미국 사람들의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한다.

④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원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상승하고 엔화 가치는 하락하므로, **같은 금액의 엔화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줄어든다**. 따라서 일본 현지의 학비가 같다면 한국 학부모의 원화 기준 송금 부담이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표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엔화 가치는 하락한다. 원화 가치의 상승은 같은 원화로 더 많은 달러를 살 수 있다는 뜻이며, 엔화 가치의 하락은 같은 엔화로 살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다른 조건이 같고 각국 통화로 표시된 학비·여행 경비·제품 가격이 일정하다고 보고 환율 변동의 영향을 판단한다.

① X: 원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상승하면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원화가 줄어든다. 따라서 상환할 달러 표시 외채 금액이 같다면 한국 기업이 마련해야 할 원화가 줄어,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한다**.

② O: 원화는 달러화 대비 가치가 상승하고 엔화는 하락하므로, 원화의 가치는 엔화에 대해서도 상승한다. 같은 금액의 엔화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원화가 줄어들어, **엔화로 납부하는 학비의 원화 환산 부담이 감소한다**.

③ X: 원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상승하면 미국 여행자가 같은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원화가 줄어든다. 따라서 한국에서 같은 원화 금액의 여행 경비를 지출하려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므로, **달러 기준 여행 경비 부담은 증가한다**.

④ X: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 표시 가격이 같은 한국산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오르고,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엔화 표시 가격이 같은 일본산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내린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은 일본산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져,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된다**.

NoteBase

문 20. 다음은 각 연도의 물가 상승률과 명목 GDP 증가율을 나타낸다.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는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되며, 실질 GDP 측정의 기준년도는 T－1년이다)

구분	T년	T + 1년	T + 2년
물가 상승률(전년도 대비, %)	0	3	1
명목 GDP 증가율(전년도 대비, %)	0	3	−1

① T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크다.

② T년에 비해 T＋1년의 실질 GDP는 증가하였다.

③ 실질 GDP는 T＋2년이 가장 크다.

④ GDP 디플레이터는 T＋2년이 가장 크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물가 상승률이 3%에서 1%로 낮아져도 **물가 수준은 계속 상승**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T년 100, T＋1년 103, T＋2년 104.03으로 높아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GDP 디플레이터는 기준연도의 물가 수준을 100으로 나타낸 지수이다. 실질 GDP는 명목 GDP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값으로, 명목 GDP를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구한다. 표의 두 증가율은 모두 전년도 대비 값이다.

① X: 기준연도가 T−1년이므로 그해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다. T년의 물가 상승률은 0%이므로 전년도와 물가 수준이 같아, T년의 GDP 디플레이터도 **100이다**.

② X: T+1년에는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가 모두 전년보다 3% 증가한다. 물가 영향을 제거하면 실질 GDP는 T년의 $\frac{1.03}{1.03}$ = 1배이므로 **증가하지 않고 동일하다**.

③ X: T+2년에는 명목 GDP가 1% 감소하고 GDP 디플레이터는 1% 상승한다. 따라서 실질 GDP는 T+1년의 $\frac{0.99}{1.01}$ < 1배로 감소한다. 세 연도 중 실질 GDP가 가장 큰 해는 **T년과 T+1년**이며, 두 해의 값은 같다.

④ O: T년의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므로 T+1년에는 100 × 1.03 = 103, T+2년에는 103 × 1.01 = 104.03이다. T+2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양수이므로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가장 크다**.

NoteBase